

정책제언

# 지역기업과청년의 희망 일자리 이음



김 성 하 | 강원테크노파크 경영학 박사

그동안 지역에 일하기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수도권 기업을 선호해 왔다.국내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들이 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우리 지역의 대학생 대상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지 취업희망 비율을 보면 44.7%에 머물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막연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홍보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실정이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지역청년 대상 기업 탐방,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전년도 성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400여명의 참여 학생(대학생, 고등학생)들이 70여개 지역 기업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 98%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 단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당해연도 졸업생을 기준으로 36명이 지역기업으로 취업이 연계됐다.

기업 입장에서 자사 홍보가 미흡한 상태로 채용을 위한 공고를 실시해도 지원자가 없어 인맥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긴다. 반면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현장 경험 없이 취업시장에 도전하고 상호교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위 ‘스펙쌓기’ 위주의 취업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는 취업 성공 이후의 적성 불일치, 복지 불만족 등으로 조기퇴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청년의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복리후생 수준이 높은 지역 내 기업발굴과 지역 청년 및 출향청년 U턴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청년층의 지역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지역기업 채용연계 및 청년층 미스매칭 해결과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지역 및 기업인지도 제고’와 ‘청년 역량강화, 일자리 문제해소, 자금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스크럼 형식의 연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이를 위한 협의체 운영, 참여 독려와 포상이 가능한 경진대회가 유기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지역 문제해결형 과제의 도출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능동적인 콘텐츠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단기근무자가 많은 업종보다 장기근무와 청년 취업률이 높은 제조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사업체의 절대적인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청년들의 희망적 일자리 이음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출처: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_김성하 강원테크노파크 경영학 박사



정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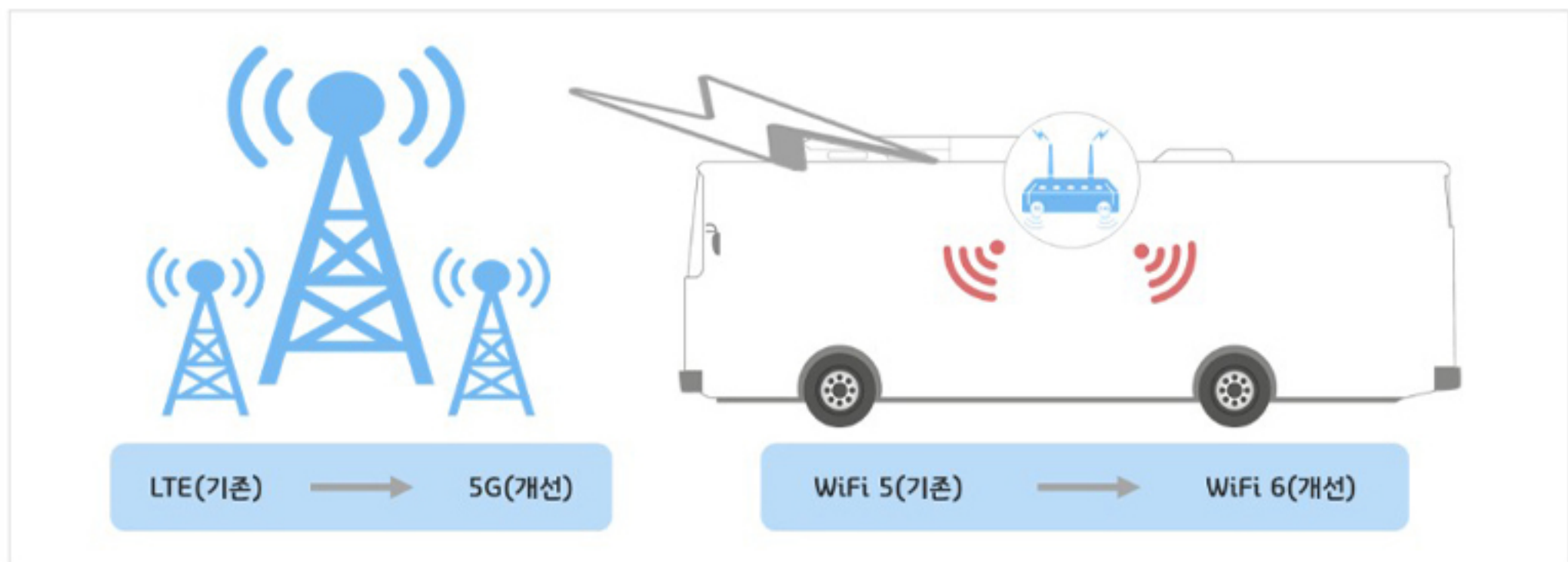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 빠르고 쾌적한 공공와이파이가 온다

- 22년 7월 시내버스 4,200대부터 5세대(5G) 백홀 와이파이로 단계적 전환 -
- 전국 공공장소 1만 개소 신규구축, 이중 2000개소 10G 백홀 시범도입 -
- 공공와이파이 길찾기 서비스로 이용 편의성 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8.(금)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보편적 통신접근성을 위한 '22년 공공와이파이 구축확대 및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와이파이는 '12년부터 구축·개방되었으며, '22년 현재 공공장소 4.3만개소, 시내버스 2.9만대 등 총 7.2만개소에서 국민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의 총 52.0%가 지속 활용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 국민 가까이에서 주요 데이터 이용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정부는 디지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가 도래하고, 동영상 등 고용량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 보다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접속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 고도화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 시내버스 와이파이 5세대(5G) 고도화 서비스 개시('22.7.1.~)



- '22년 7월부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대신 5세대(5G) 통신으로 연결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5세대(5G)로 통신 전환 시 기존 100Mbps 이하였던 와이파이 속도를 300~400Mbps급으로 3배 개선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동영상 등 고용량 콘텐츠를 이용하더라도 쾌적하게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는 4,200대를 우선 고도화하여 '22년 7월부터 5세대(5G) 기반으로 본격 서비스하고, 나머지 시내버스도 '23년 내 5세대(5G) 전환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구축 및 고도화(~'22.12.)

- 정부는 올해 도서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 1만 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구축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6월, LGU+) 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 특히 올해는 신기술인 와이파이 6E\*를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동시 접속, 안전한 연결과 높은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21년 하반기 제품 출시된 와이파이 규격으로, 2.4GHz, 5GHz만 활용하는 기존의 와이파이 6에 비해 6GHz 대역을 추가 사용하여 체감속도 및 동시접속 안정성 향상
  - 또한, 1만 개소 중 20%에 해당하는 2천 개소에 대해서는 10G급 초고속 통신 연결을 시범 도입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도 병목현상 없는 쾌적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3. 공공와이파이 찾기 편의성 개선(~'22.12.)

□ 공공와이파이 누리집(www.wififree.kr) 및 앱이 이용자 근처에 소재한 공공와이파이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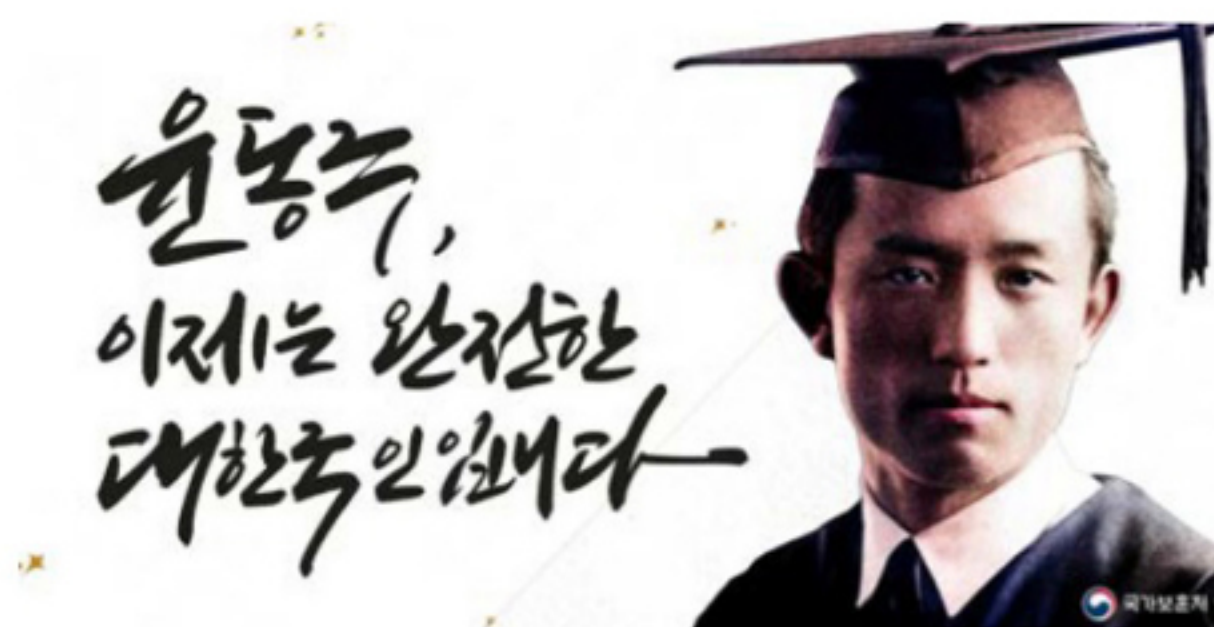


- 그간 홈페이지와 앱이 공공와이파이가 소재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안내해 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무료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공공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보편적인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시내버스에 5세대(5G) 와이파이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

## 윤동주, 이제는 완전한 대한민국인(大韓國人)입니다.

- 국가보훈처,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최초 추진-



- 윤동주, 장인환, 홍범도, 송몽규 등 직계후손 없어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 대한민국의 적(籍) 부여
- 정부 직권으로 직계후손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최초 창설
- 등록기준지,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지정
- 8월 중 독립기념관에서 156명 가족관계등록부 특별전시·창설 완료 행사 예정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추진 등 국가적 예우 성심 다할 것'



- 민족 저항시인 운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1일 '운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에서 본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9.02.06.)한 후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신재호, 이상설 등 총 73명의 독립유공자. 특히 신재호선생 등은 1912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으며 등록을 거부, 호적이 없었으나 2009년 법 개정 이후 후손 신청에 의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추진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1945년 광복이전에 사망하여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 호적변천 개요 : 조선민사령 (1912년 제정,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률) → 조선호적령(1922년 제정, 일제강점기 호적 법규) → 가족관계등록법(2007, 5,17 제정, 2008. 1. 1 시행, 기존의 호주를 중심으로 家 단위를, 가족구성원 중심으로 변경, 2007.12.31. 호적제도 폐지)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 중에는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 운동주 지사('90 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 옹호한스티븐스(미국)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62 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62 대통령장, '21 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62 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운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송몽규 지사('95 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2남)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조선인의 국적은 「국적법」(1948.12.20.)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 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운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 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다.
    - \*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1948.5.11.)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 1221 판결)
  - 국가보훈처는 공적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 특히,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유족이 없어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숨 쉬는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을 선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 \*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단체 및 기념사업회, 서대문형무소 등 유관기관
  - 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운동주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
  - 이어 '국가보훈처는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無籍)으로 남지않도록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모두 완료되면, 8월 중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박민식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한다

-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  
-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7.12일(화) 「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일류상품**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구분

**현재**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며, 세계시장규모 또는 수출규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차세대**

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친환경 등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업종 간사기관을 추가하고,
- 미래 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추천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조정, 가점 부여 등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8.26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업종별 간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은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이번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또는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www.w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주희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

-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된 것임
- 이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로 모든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행안부는 정책개발비를 의원 개인이 아닌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용도를 연구 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제한함
-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전문가 등을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초한 연구결과물과 이에 따른 신뢰성 확보, 또한 이를 통한 관련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반면, 연구용역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연구용역의 남발에 대한 경계 및 그 결과가 실제 지역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의원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됨

- 지방의원의 의원연구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정책연구용역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입법역량과 정책역량 획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 다양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음

## 2.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의원연구단체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직무성과 창출을 위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총괄하는 개념을 광범위한 의정역량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심의·의결기능 및 행정감사기능 등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및 행정관리역량 등이 요구됨
  - 대의역량 :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
  - 입법역량 : 자치입법을 착안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역량
  - 정책역량 :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의정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기술 및 지식 등을 갖고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 행정관리역량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 예산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

의원연구단체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됨

-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된 이후 의원연구단체는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의원연구단체의 주요 연구활동 범위는 각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토론회·공청회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광역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현황

- 의원연구단체는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의원연구단체는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에 따라 내용은 상이하나, 대체로 구성과 등록, 등록취소, 운영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그림 2] 의원연구단체 구성 절차



출처: 경기도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 광역의회의 의원연구단체는 조례(12곳), 규칙(2곳) 및 규정(3곳) 등에 의하여 근거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9일 기준으로 광역의회의 의원연구단체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음

• [표 1] 광역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황

구분	조례	의원연구단체 수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5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3
대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4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13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7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4
울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4
경기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33
강원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10
충북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충남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전북	전라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8
전남	전라남도의회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8
경북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남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12

출처: 2022년 6월 9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현황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 3.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1.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

##### • 1)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고려

###### ▪ 문제점

- 의원연구단체는 주로 정책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
- 이에 따라 일부 연구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 ▪ 개선방안

- 해당 과제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제관리와 더불어 정책연구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 의회 내부에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결과 검증에 위한 정책지원관 활용

###### ▪ 문제점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은 주로 1명 내지 2명의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표 1>과 같이 의회 내 연구단체는 적게는 2개에서 10개 이상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소수의 담당 공무원이 의원연구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구활동의 내용과 질을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 개선방안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제41조)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인 의원연구단체의 결과에 대한 검증 등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3) 용역 참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 ▪ 문제점

-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 많은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연구용역의 남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연구용역업체의 전문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소위 '인맥'을 통한 연구몰아주기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함

###### ▪ 개선방안

- 용역 참여자(연구용역업체 등)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의회 내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용역 참여자에 대한 정기평가 등을 수행하여 불성실한 용역업체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구성과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 정책화 등 연구성과의 활용촉진 장치 마련

##### • 1)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물 환류장치 마련

###### ▪ 문제점

-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 이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활동이 종료된 연구단체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활동 결과만을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구 성과물의 환류 혹은 활용 여부는 해당 연구단체에 속한 의원의 개인적 판단 영역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음



## ■ 개선방안

- 연구단체의 결과물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원의 의정활동의 각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혹은 연구단체의 활동이 형식적인 교육이나 토론회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여부까지 연구활동 계획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2) 성과물 공유·확산을 위한 ‘(가칭)의정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 문제점

- 현재의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된 다양한 결과물은 개별 의회에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혹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연구결과물이 개별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유사한 연구에 대하여 여러 지방의회에서 중복된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동일한 의회 내에서도 의원연구단체 간의 정보공유 부족으로 유사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함

### ■ 개선방안

- 유사연구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성과물의 공유를 통한 정책연구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칭)의정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와 같이 광역·기초의회의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으로 통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 제고 및 타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출처: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행정안전부

## 이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서 꺼내세요!

비행기 탈 때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홍길민  
900101  
세종특별자치시

남은시간 21초

QR코드를 리더기에 스캔하세요

상세정보 표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 확인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효력이 같아요!

홍길민  
900101  
세종특별자치시

남은시간 21초

QR코드를 리더기에 스캔하세요

상세정보 표시


\* 6월 29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 서비스 운영, 7월 12일 본격시행




알기쉬운 정책용어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언제,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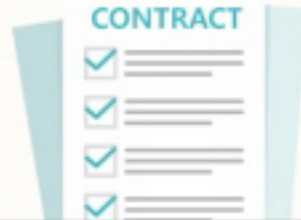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 확인  
(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승선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를 확인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24앱에서 본인인증과 비밀번호로 등록하세요

**1**  정부24

정부24 앱(APP)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 실행

**2**  PASS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확인

**3** 

주민등록증 필수 정보 입력 후  
비밀번호 등록

**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완료

정부24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해요!





알기쉬운정책용어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진위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앱에서 QR코드로 인증받으세요.

-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메뉴 실행  
\* 메뉴 → 서비스 → 신청/확인 공유 →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QR진위확인
- 

카메라구동 후 QR코드 촬영
- 

진위여부 결과 확인

서비스 등록/QR  
진위확인 콜센터  
070-8892-4600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용이나 위·변조 위험은 없나요?

보안은 강화되고 도용방지는 엄격해 졌어요.


**보안강화**





기본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상세개인정보는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가능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T대에서만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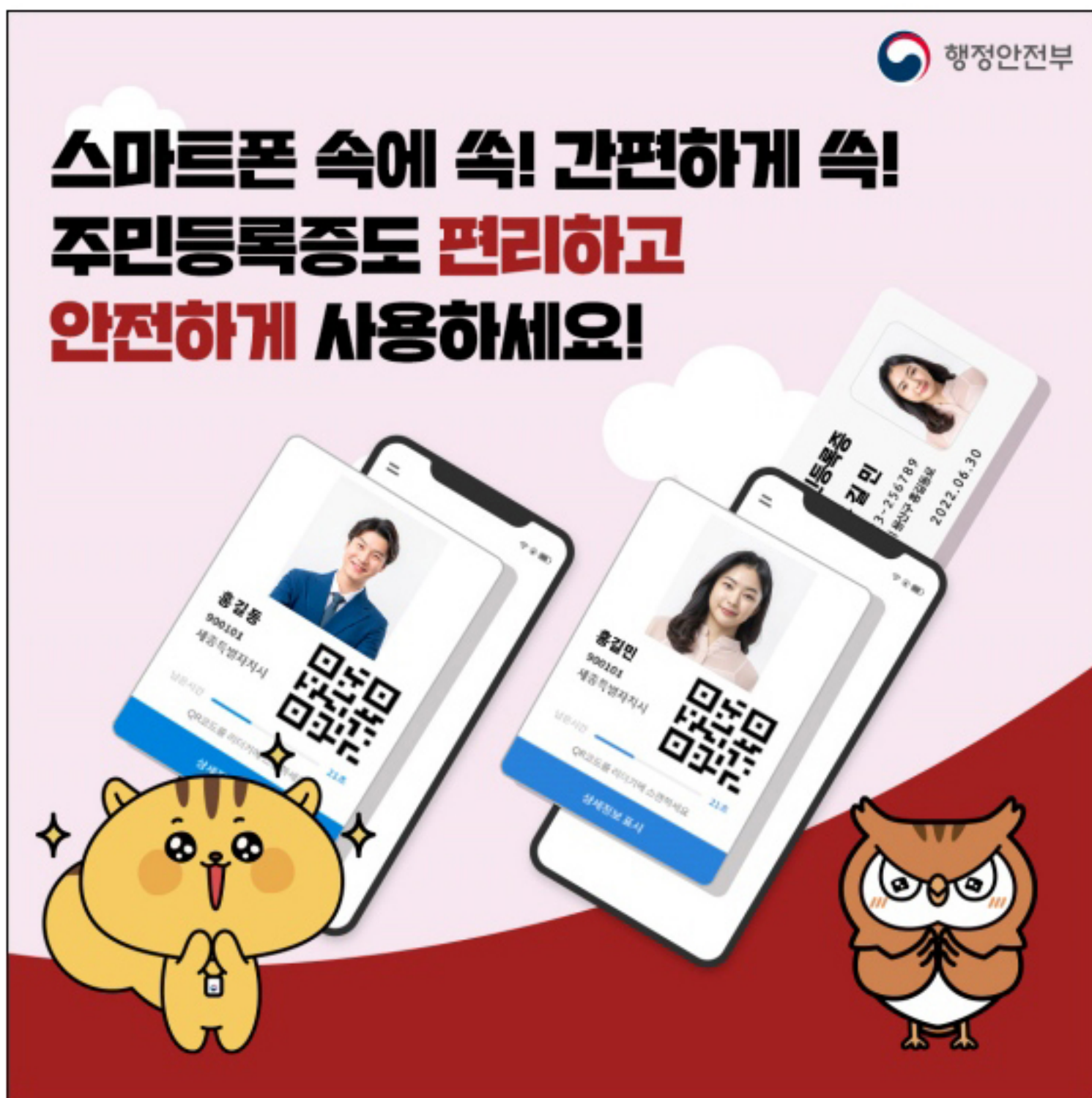
**도용방지**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 후 정보무늬(QR) 초기화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